
2020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

2020. 2. 27



국토교통부



목 차



I.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1

II.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3

III. 주요업무 추진계획 4

IV. 2020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4

【별첨】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I.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

1 핵심정책 추진성과

① [안전 및 상생] 생활 속 안전 확보 및 근로여건 개선

- 경찰청·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4년만에 역대 최저수준으로 감축('19.12, 3,351명), 철도 사고·항공 안전장애 수도 감소*
* (철도 사고) '18. 98건 → '19. 73건 / (항공 주요 안전장애) '18. 34건 → '19. 28건
- 직접시공 대상 확대('19.3) 및 임금직불제 의무화(공공공사, '19.6) 등 건설 혁신, 택시 사납금 폐지·월급제 도입, 화물차 안전운임 결정('19.12)

② [교통 편의]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소기반 마련 및 교통공공성 강화

- 광역교통 전담 조직으로 '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' 설립('19.3), 중장기 광역교통 정책방향을 담은 「광역교통 2030」 선포('19.10)
 - GTX-B 예타 통과 및 신안산선 착공('19.8), 김포도시철도 개통('19.9), M버스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, 고속도로 1개(2.5km)·국도 25개(189km) 개통
- 천안논산 및 구리포천 통행료 인하, 대구부산 및 서울춘천 인하방안 마련,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확대('19.6) 등 교통비 절감
- 공공형버스 지원제도 도입, 공공형택시 확대('18. 123만명 → '19. 194만명), 휠체어버스 시범도입('19.10)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 서비스 확대

③ [혁신 성장]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

- 「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('18.5)」에 따라 창업공간 조성(131개), 신규 일자리 창출(10,989개), 교육·훈련생 양성(14,789명), 「로드맵 2.0」 발표('19.11)
- 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스마트시티 장관회의 개최 및 부산 시범도시 착공('19.11), 수소경제 지원을 위한 충전소 확충(고속도로휴게소 8기 운영)
- 자율차 레벨3 안전기준 마련('19.12), 스마트건설지원센터 확대 ('19.6), 드론특별법 제정('19.4)·실증도시('19.7, 2곳)·전용시험장('19.9, 3곳) 구축

4 [주거 안정]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및 실소유자 중심 시장 관리

- 서울 청약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중('18. 94.4% → '19. 97.9%)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('18. 16% → '19. 19%) 증가 등 실수요자 중심 시장 조성
- 행복주택, 고령자복지주택 등 맞춤형 공적주택(20.5만호)을 차질없이 공급, 주거급여 상한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('18. 94만 → '19. 104만가구)
 - 무주택 서민 26만 가구에 주택자금 저리 융자 지원, 층간소음 사후 성능 확인제도('19.4)를 통해 주택의 품질개선 유도
- '19년 하반기 주택시장 불안정에 따라, 분양가상한제 지정('19.11) 및 관계기관 집중 점검('19.10~12), 「주택시장 안정화방안」 발표('19.12)
 -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확정(3차, '19.5) 후 16곳(15.4만호)은 지구지정 완료, 공시가격 현실화('19.1~4), 「'20년 가격공시 및 신뢰성 제고방안」 발표('19.12)

2 평가와 반성

1 [경제 활력] 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 부족

- 건설투자 감소 등에 따라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고용시장의 전반적 회복세에도 불구하고,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세
- 도시재생 뉴딜, 캠퍼스 혁신파크 등 지역 신산업 입지를 위한 정책의 체감도가 낮고, 스마트시티, 자율차 등 혁신기술의 성과 부족

2 [국민 생활]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민생 정책

-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했으나 건설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안전 사고 발생, 항공기 고장 및 기체결합 등으로 국민 불안 가중
- 풍부한 유동성의 시장 유입으로 서울 집값은 '19.7월부터 상승, 12.16 대책 이후 상승세는 둔화되나 불안요인 상존
- 주거복지로드맵 이행 중반기를 맞아 취약계층 주거지원, 1인가구 지원 등 주거복지 핵심과제 성과창출 필요

II.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 업무추진 여건

- **[경제]** 글로벌 경기회복, 확장적 거시정책 및 투자·내수활성화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개선 흐름 예상, 다만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* 존재
 - * 신종 바이러스 전파,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, 글로벌 교역 부진, 중국 내수 부진 등
-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혁신성장 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, 행·재정적 지원 필요
- **[사회]** 고도 성장의 부작용으로 심화되었던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의 가치가 강조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요구가 증가
 -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보강을 위한 주거·교통 복지 확충, 일자리 확대 및 질 개선, 사회 전반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등이 중요

2 업무추진 방향

- **[경제]**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도록 노후산단 재생,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의 혁신거점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, 거점 간 교통인프라 확충
- **[혁신]** 혁신기술 고도화, 벤처·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
 - 드론·자율차 등 혁신기술 고도화, 국토교통 분야의 중견기업 육성, 건설·물류업 분야의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의 역동성 제고
- **[포용]**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는 따뜻한 포용사회의 기반 조성
 -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여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고, 교통사고 및 건설현장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
 -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고,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여 출퇴근길을 편안하게 개선
- **[공정]**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'함께 잘 사는 나라' 구현에 이바지
 - 청약 및 공시제도 개편, 임차인 보호 확대 등 불공정성이 내재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

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

정책
비전

**활력 넘치는 경제, 편안한 일상
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.**

방향

◇ **경제활력** ◇ **혁신** ◇ **포용** ◇ **공정**

주요
정책
과제

**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
경제활력 제고**

-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육성
- 지역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
- 품격있는 도시공간 구현

**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
좋은 일자리로 혁신**

-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
- 국토교통 벤처·중소기업 집중 지원
- 상생을 위한 일자리의 질 개선

**포용적 주거복지망 확충 및
부동산시장 질서 확립**

-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
- 인구구조 변화 대응
-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

**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한
편리한 출퇴근길**

-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
- 교통 편의 제고 및 공공성 강화
- 교통 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

**누구나 안전한
생활환경 조성**

- OECD 수준의 교통안전 확보
- 건설안전 위협요인 근절
- 생활환경 안전 확보

<< 경제활력 제고 「3대 목표 8대 전략」 + 「2대 민생현안」 >>

경제활력 목표1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

①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

- △ 인프라+입주기업 인센티브 확대로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거점화
- △ 새만금 사업 본격 추진, 행복도시·제주 자족기능 강화

② 노후지역 재생 혁신

- △ 혁신지구(패스트트랙) 도입 등 新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(15곳)
- △ 노후산단을 창업·문화·여가의 중심지로 大개조(5곳)
- △ 공공주도로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을 복합개발(5곳)

③ 잠재 거점을 산업·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

- △ 지방대학 등에 부처별 지원사업, 규제완화 집중하는 기업혁신특구 도입
- △ 인바운드 시범공항(항공+관광)으로 지역관광 활성화
- △ 스마트시티(세종·부산) 및 수소도시(안산, 울산, 전주·완주)로 도시경쟁력 강화

경제활력 목표2 지역SOC 투자 활성화

④ 지역SOC 투자 확대

- △ 광역철도망 등 교통SOC, 노후·생활SOC 투자 확대

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(예타면제) 본격 추진 : 총사업비 21.7조원

경제활력 목표3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→ 좋은 일자리 2만 개

⑥ 국토교통 산업 혁신

- △ 건설 임금직불제 확산, 광역버스 준공영제·택시월급제 등 근로여건 개선

⑦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

- △ 플랜트·인프라·스마트시티 펀드(PIS펀드, 1.5조원)로 해외 PPP사업 수주 지원
- △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(5개국) 등 해외 스마트시티 수출성과 가시화

⑧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

- △ 드론택시 시험비행, 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 시행
- △ 국토교통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, 스케일업 지원방안 마련

민생과제 1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

- △ '20년 21만호 공급 → OECD 평균인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% 달성
- △ 공시가격 신뢰도 제고,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흔들림 없는 부동산 시장 안정

민생과제 2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

- △ GTX 등 광역철도망 확충, 대심도 건설사업 제도적 기반 확충
- △ 서울역·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서울 강북지역의 경제허브화

1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제활력을 높이겠습니다.

< 대국민 약속 >

- ◆ 지역의 **일자리·산업·균형발전 거점**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**경제에 활력**을 불어넣고 **도시의 품격**도 높이겠습니다.

1.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육성

1 지역의 일자리 거점 조성

- 쇠퇴지역 내 주거·상업·산업기능이 융·복합된 경제거점 조성을 위해 공공주도의 **혁신지구**(천안·고양)·**총괄관리자사업**(인천·부산) 착수
 - * ('20년 선정계획) 도시재생혁신지구(5곳), 총괄사업관리자 사업(10곳) 등
- **既往추진사업**(284곳)도 내실있게 추진, 연내 약 300개의 **생활SOC** 공급
- 노후산단 내 휴·폐업부지 **고밀·복합개발**(산업단지 상상허브, 2곳), **산단·주변지역 연계 도시재생 뉴딜**(3곳) 등 **노후산단 재생 혁신** 착수
 -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과 연계하여 산단의 솔루션 개발·지원,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스마트 주차장 설치 등 **노후 산업SOC 스마트화**('20.11)
- **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**에 대해 지자체의 **관리계획 수립** 후 **공기업 주도로 지원·기반시설 정비** 및 **복합개발**(시범사업 5곳 착수, '20.9)

2 첨단산업 거점 활성화

- 대학, 철도역사 등 지방 도심에 산업, 문화, 주거 등과 융·복합된 저렴한 기업입주공간을 조성하는 ^(가칭)**기업혁신특구** 도입(계획수립, '20.6)
 - **캠퍼스 혁신파크**(국토·중기·교육부), 창업·스케일업 지원(중기부) 등 **관련 부처 협업을 강화**하고, **규제 완화** 및 **세제·금융혜택** 등 집중 지원
 - * (캠퍼스 혁신파크) 선도사업 착공(강원대, 한남대, 한양대), 신규사업 선정('20.12)
- **판교2벨리에 글로벌Biz센터**(100개社, '20.6 착공), **기업성장센터**(300개社 + 행복주택 195호, '20.11 착공)를 공급하여 **기업공간 확대** 및 **주거 지원**
 - * (지방 도시첨단산단) 10곳에 창업·성장·소통교류 공간 등이 복합된 혁신성장센터 조성

③ 공항 중심 지역거점 개발

- 양양·청주·무안을 **인바운드 시범공항**으로 지정, 문체부·지자체와 함께 운수권 배분, 노선운영 인센티브 확대 등 항공·관광 융복합사업 지원
- 공항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과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한 **공항주변 개발계획** 마련(시범사업 1~2곳, '20.11)

2. 지역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

①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

- **혁신도시의 경제거점화**를 위해 기업입주공간 공급 등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, 복합혁신센터(7곳 착공, '20.5) 등 **생활인프라**도 확충
- 태양광 선도사업(0.1GW)·수변도시 조성사업 착공('20.12), 투자진흥지구 도입 등 투자유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('20.11) **새만금 조성 본격화**
- 바이오·헬스 플랫폼 조성전략 수립('20.9) 등 **행복도시 자족기능 강화**, 제주 의료서비스센터 착공('20.5) 및 제2첨단과기단지 계획 수립('20.11)
- 민간활력 제고를 위해 역대 최고수준으로 **재정 조기집행**('19. 54.9 → '20. 60% 목표), 지자체 협업강화 등을 통해 실집행도 역대 **최대화**(55%)

② 국가 균형발전 인프라(에타면제 사업) 본격 착수

- 15개의 인프라 건설사업(총사업비 21.7조원)에 대해 **턴키방식**(설계·시공 동시 발주), 기본 및 실시설계 통합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
- **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**를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, 동해선 단선 전철화(200억원), 국도20호선 신안-생비량(113억원)부터 연내 착공

③ 지역 공항 운영 및 인프라 구축

- 제2터미널 확장, 제4활주로 건설 등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추진 ('24. 완료), 여객처리능력 제고를 위해 항공사 단계적 재배치('20.11~)
 - **김해 신공항**은 총리실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조치, **제주 제2공항**은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
- * (흑산) 주요쟁점 보완, (백령) 중장기계획 반영('20.11), (울릉) 착공('20.6), (새만금) 기본계획 착수('20.6)

3. 품격있는 도시공간 구현

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공간 관리

- **용산공원** 조성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미군 장교숙소 등 **기반환부지 개방**(‘20.7), 온전한 녹지축 조성을 위해 **공원경계 확장**(면적 26% 증)
- **미집행 도시계획시설** 실효에 대응, 행위제한 완화 등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유도(‘20.3), 난개발 우려지역은 **관리방안 마련**
- **개발제한구역**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(지원반 운영, ‘20.1), **해제불가 등급**(10년간) 신설, 항공사진·드론을 활용한 **단계적 관리체계** 구축(‘20.9)

② 도시가치를 높이는 건축 디자인 구현

- **공공건축 디자인 향상**을 위한 체계적 업무절차 기준 마련(‘20.11), **총괄·공공건축가** 위촉 지원(‘20.4), **설계자의 시공 참여 활성화**(‘20.8) 추진
- **한옥 신기술 공공건축 시범 적용**(3곳), **우수 교육기관 지정기준** 마련(‘20.10), **한옥설계 자동화프로그램** 보급(‘20.11) 등 **한옥 건축 확산**

③ 매력있는 경관 관리와 체계적인 성장관리

- 도시·비도시지역의 특성에 맞게 **경관 관리체계를 체계화**(경관법 개정, ‘20.10), **신기술(VR, AR 등) 및 3차원 공간정보 활용방안** 마련(‘20.10)
- 지자체가 **난개발 관리수단**으로 **성장관리방안**을 적극 활용하도록 **인센티브**를 확대하고 **사후관리 강화**(국토계획법, ‘20.11)

4. 한반도 평화시대 준비

① 남북 인프라 협력의 실천전략 마련 및 단계적 추진

- 대내·외 경험여건을 고려하여 **철도·도로 연결** 등 **남북 인프라 협력**의 **부문별 추진전략** 마련하고, **한반도 평화경제** 기반 구축

② 국제 철도·도로 연계 대비

- **동아시아 철도공동체** 실현을 위해 UNESCAP 등과 **국제포럼** 설립(‘20.6), **국제 간선도로망(Asian-Highway)** 구성을 위해 **신규노선 지정** 추진(‘20.11)

②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.

< 대국민 약속 >

◆ **혁신성장 사업**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국토교통 **벤처·중소기업**을 집중 지원하여 **2만개** 이상의 **질 좋은 일자리**를 창출하겠습니다.

1.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

| 혁신성장 사업 | 성과 가시화 내용 |
|---------------|--|
| 자율주행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K-city 내 실험 등이 가능한 혁신성장센터 구축 착수('20.4), 부분 자율주행 보험제도 완비('20.8),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(3곳, '20.11) ▶ 3D 정밀지도 확대(8,300km), C-ITS서비스 실증('20.4), 미래차 시범도로('20.6) 및 도로대장 AI 업데이트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정비 |
| 드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드론특화도시(시범사업, '20.11), 드론공원(4 → 8곳), 상용화 패스트트랙 및 공공부문 우선구매('20.11) 등을 통해 드론산업 기반 구축 ▶ 불법드론대응시스템 구축계획 수립(김포, '20.8), 드론탐지·자동추적 레이더 배치(인천 '20.6), 실명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('20.7) 등 드론안전 확보 |
| 스마트 시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가시범도시 착공(세종, '20.7), 기존도시 스마트화(챌린지사업) 확대(10 → 18곳), AI 데이터허브 구축('20.10) 등 스마트시티 조성 본격화 ▶ 팀코리아 활용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 해외진출 활성화, 해외 도시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(5곳), PIS펀드 활용 금융지원 |
| 스마트 건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스마트 턴키사업 지속 확산(6건), BIM설계 의무발주 확대(대형 공공 공사 전반, '20.1~) 등 스마트 건설기술 산업화 촉진 ▶ 로봇시공·가상시공·스마트 안전관리 등 핵심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R&D 사업 착수(2천억, '20.4) |
| 수소 경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소도시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('20.3), 시범도시별 종합계획 수립 및 핵심시설 건설(3곳, '20.7) 등 수소도시 조성 착수 ▶ 주요 환승센터에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(후보지 선정, '20.9), 수소충전소 추가설치(고속도로휴게소 15기, 혁신도시 1기, 행복도시 1기) 등 인프라 구축 |
| 공간정보 및 데이터 경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토위성 발사, 3차원 지도모델 구축 시범사업 및 수요 맞춤형 디지털 트윈 서비스 시범운영(전주, '20.7) 등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▶ 보유데이터 중장기 개방전략 마련('20.3), 빅데이터 선도과제 발굴('20.6), 데이터맵 및 단일창구 구축('20.11) 등 데이터 경제 촉진 |
| 제로에너지 건축(ZEB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적용 의무화, 구리갈매 등 지구단위 공공주택 사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주택단지 착공('20.11) 등 ZEB 확산 |

2. 국토교통 벤처·중소기업 집중 지원

① One-call 벤처·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

- 분야별 국토부·업계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 발굴, '국토교통기술 사업화 지원 허브(KAIA)'를 설치하여 애로사항 지원 총괄*
 - *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선진 사례, 기술, 경험 등을 지원
- 부처 내 분야별 지원전담관(과장급) 및 기업별 지원담당코치(4, 5급) 지정을 통해 규제 개선, 법령의 적극적 해석 등 컨설팅

② 국토교통 기업 특화 지원

- 중기부·산업부·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범부처 지원체계를 재구성하고 메뉴판형 문제해결 툴킷(tool-kit)* 작성·보급
 - * 창업 지원, 금융 지원, R&D 지원, 인력양성, 판로개척 등 단계별 지원사업
- 우수 신기술 적용이 가능한 테스트베드 확충, 시범사업 지원, 공공 구매 대책 등 국토교통 기업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 마련('20.5)

③ 기업활동 제약 규제 원점 재검토

- 국토부 내 규제 솔루션팀을 설치하고('20.2), 국민의 개선요구가 높은 '국토교통 규제혁신 과제'를 선정('20.3) 후 맞춤형 규제 혁신 추진

④ 신규 일자리 창출

- 벤처·중소기업 집중 지원, 창업공간 조성(1,171개), 국토교통 혁신펀드(국비·민간 매칭 167억원) 등으로 '20년 일자리창출 목표(21,528명) 초과 달성 추진

3. 상생을 위한 일자리의 질 개선

① 건설업 공정성 강화

-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을 통해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공사 확산('20.10), 적정임금제 전면 도입(방안 마련, '20.6) 등 임금보장 확립
 - * (체불 방지) 상습체불업자 공표 확대, 체불방지 사업주는 상호협력평가·고용평가 가점 부여('20.9)

- 하도급 간접비에 대한 별도 지급규정 마련, 공제조합 의사결정체계 개편 및 이익잉여금 처리기준 마련('20.7), 건설업의 투명성 강화

② 운수·물류업 근로여건 개선

- 택시 월급제·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, 개인택시 양수요건을 개선 하여(경력요건 완화, '20.4) 청·장년 유입 유도
- 버스인력 양성사업(3.1천명),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노선버스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, 시행 1년간의 성과 분석을 통해 보완사항 발굴
- 과로·과적·과속 관행을 개선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, 작업장 근로환경 개선 등 택배종사자 보호

③ 공항 지상조업 근로환경 개선

- 사고 시 법인책임 확대 및 뒤통스 시 경보 등 안전체계 정비('20.6), 주요 공항에 CCTV, 휴게실·화장실 등 안전·편의시설 확충('20.11)

4. 국토교통 산업 혁신

① 교통·물류 산업

- 선도부품 신규 개발(5종) 및 수입대체 국산화 개발(10종, 국제인증)을 위한 대규모 국가R&D를 실시('20.4~'25.12)하여 철도 부품산업 육성
 - 시험인증비, 컨설팅 등 국제인증 취득지원 확대('19. 5억 → '20. 10억원), 오송 시험전용선로 운영을 합리화(방안 마련, '20.9)하여 기업 지원
- 안전성 문제가 적은 장치에 대한 튜닝 승인절차 면제('20.11), 튜닝카 성능·안전시험센터 건설(설계 착수, '20.9)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
 - 소량 생산차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수제차 시장을 활성화, 대체부품 생산장비 도입을 지원하고('20.10), 친환경차 검사기술 개발('20.11)
- 중소기업체를 위한 공유형 물류단지 조성에 착수하고(수도권 3곳이상, '20.9), 첨단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해 자금 등 지원(인증제 도입, '20.10)
- 항공기 도입 공적보증('20.6), 지역 맞춤형 항공산업 활성화*

* (김포) LCC 경정비, (사천) 항공기 중정비(KAEMS), (인천) 화물기 개조, 해외 엔진업체 유치

② 건설 산업

- '100대 혁신뿌리기업'을 선정하고('20.8) 시공능력평가 가산, 입찰평가 가점,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우선 입주 등을 통해 **중견기업으로 육성**
 - * (중소업체 보호) 우량기업에 대한 공제 보증 수수료 인하(최대 5%)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(30%), 하도급 간접비 지급 등 지속 추진
- **종합·전문업 간 상호 진출**('21년) 대비 실적·주력분야 공시 등 **제도를 완비**하고 전문업종의 **대업종화**('20.9) 등 **건설구조 개편 완료**
 - * 대국민 공모를 통해 건설규제 전면 조사('20.3) 후 「건설 규제개혁 로드맵」 마련('20.6)

③ 부동산 서비스 산업

- 업종별 맞춤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('20.6), **프롭테크** 등 **부동산 新산업 육성방안** 마련('20.11)
- 리츠 운영규제 합리화, 영업범위 확대 등 **자기관리리츠 활성화**(('20.7), 인가·검사업무 위탁 등 **공모리츠** 체계를 개편('20.11)하여 **리츠시장 육성**
- 중개법인 역량 강화, 행정처분 체계 개편 등 **중개서비스 활성화**(('20.11), 중소법인 참여 확대 등 **공정한 감정평가 환경 조성**(방안 마련, '20.6)

④ 국토교통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

- KIND의 타당성조사 지원(75억원, '20.2) 및 해외인프라센터 확대('20.7), 진출기업 금융자문·주선 지원(4건) 등을 통해 **투자개발사업 활성화**
 - 제안형펀드(2천억원, '20.3) 등 **PIS펀드** 투자 대상을 확정하고(5천억원, 7건), **GIF(4~7호)** 투자를 통해 **베트남, 칠레** 등 해외진출 다각화 지원
 - **한국형 스마트 공항모델** 구축 등 **종합적인 수주지원방안** 마련('20.7)
- 스타트업 기술 연계 신규 ODA사업 지원('20.10), 해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민·관 정례협의체 구성('20.4) 등 **벤처·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**
- 인도네시아 수도이전, 미얀마 달라신도시, 태국 도로 협력 등 **신남방 G2G 협력**을 통해 **지역개발·교통 인프라 신규 프로젝트*** 발굴
 - * 한·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('20.12 실시설계 完), 베트남 흥연성 산업단지('20.10 토지사용권 취득)
- **한·중 간 제3국 진출협력을 위한 공동포럼** 개최('20.9), **러시아(연해주) 진출** 지원을 위해 **한국형 산단 개발(기공식, '20.10)** 등 **신북방 해외진출** 확대

③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.

< 대국민 약속 >

◆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을 속도감있게 공급하고,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관리하여 공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.

1.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

①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

-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를 연내 차질없이 공급
 - 특히, 청년을 위해 행복주택(1만호), 청년공유주택*(1천호) 등 공적임대 4.3만호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(1천호) 공급
- * 역세권 등 우량입지의 노후 고시원('20.8, 1호 노량진 청년주택)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

< 주거복지로드맵 공적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(단위: 만호) >

| 공급유형 | 공급계획 | '18년(실적) | '19년(실적) | '20년 | '21년 | '22년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공공임대 | 90.2 | 17.2(19.4) | 17.6(18.5) | 18.1 | 18.6 | 18.7 |
| 청년 | 21.0 | 3.6(3.7) | 4.1(4.8) | 4.3 | 4.5 | 4.5 |
| 신혼부부 | 25.0 | 3.3(3.0) | 4.6(4.4) | 5.2 | 5.8 | 6.1 |
| 고령자 | 5.0 | 0.9(1.4) | 0.9(0.9) | 1.0 | 1.1 | 1.1 |
| 일반 저소득 | 39.2 | 9.4(11.3) | 8.0(8.4) | 7.6 | 7.2 | 7.0 |
| 공공분양(착공) | 15.0 | 1.8(1.9) | 2.9(3.1) | 2.9 | 3.5 | 3.9 |
| 합계 | 105.2 | 19.0(21.3) | 20.5(21.6) | 21.0 | 22.1 | 22.6 |

- 수도권 30만호 등 신규부지를 반영하여 '20~'25년간 공적주택 공급 계획 수립, '25년 장기 공공임대재고율 10%* 확보 추진(OECD 10위 內)
 - * 장기공공임대재고 목표(%) '18년 148만호(7.1%) → '22년 200만호(9%) → '25년 240만호(10%)
- 그 간의 추진상황, 환경변화 등을 감안, '22년이후 중장기 공급계획, 1인가구·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을 반영하여 주거복지로드맵 보완('20.3)
- 특색있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거점이 되도록 공연장, 웹툰센터, 무형문화재 교육시설 등과 복합된 문화예술인 행복주택 등 확산
 - * (시범사업 3곳) 서울 국립극단, 부천 영상, 지방 1곳
- 영구·국민·행복주택 등 입주자격, 임대조건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·공급*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주거환경 조성
 - * 유형구분 없는 공공임대 공급근거 마련('20.4), 선도사업 승인(2곳 약 1천호, '20.11)

② 낙후된 주거공간의 재창조

- 기존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주도의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**쪽방촌**을 정비하고 영구임대, 행복주택 공급(영등포 지구지정 '20.11, 지방 1곳 '20.9)
 - * (새뜰마을) 사업 유형에 쪽방촌 추가, 국비지원 및 지자체의 토지매입비 지원한도 확대('20.3)
- 붕괴가 우려되는 **노후아파트**에 대해 긴급 정비사업(도시정비법),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(국비 50억원)를 연계하여 정비 착수(영등포, '20.6)
- 준공 후 30년이 도래(서울내 '22년까지 19개단지 3.1만호)하는 **노후 영구 임대주택 주거재생** 시범모델 및 선도사업 추진방안 마련('20.11)
- 노후고시원·쪽방거주 등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보증금·이사비·생필품 및 자활·돌봄 등 **패키지 지원**
 - 찾아가는 상담(~'19.7) 및 관계기관 합동 전국 전수조사('19.12~'20.1) 등을 통해 발굴한 약 8천 가구 공공임대 이주절차 착수('20.3~)
 - * 수요발굴·주거복지서비스 등을 위해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확대(39개 → 45개 이상)
- 침수우려 등 지원이 시급한 **반지하 가구**는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(~'20.6)하고, 공공임대 우선공급·보증금 지원 등 지원 강화

③ 공동주택 거주자 권리보호 강화

-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측정·확인제도를 도입('20.6)하여 층간소음 관리, 주택성능등급 기준을 개선('20.10)하여 **공동주택의 성능 향상** 유도
- **공동주택 하자 저감**을 위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, 품질점검단 운영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체계 구축, 부실시공업체 감리 강화('20.6)

2. 서민 주거거점의 속도감있는 공급

①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조기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

- 3기 신도시 3곳(남양주·하남·인천)을 포함하여 지구지정이 완료된 **1·2차 지구 15.4만호***(16곳)는 **지구계획** 수립('20.下)
 - * (신도시) 남양주왕숙·하남교산·인천계양, (대·중규모) 과천·시흥하중·부천역곡·성남낙생 등

- 입지가 우수한 일부 지구는 **첫마을 시범사업**으로 '21년 입주자 모집, 고양·부천 등 3차지구 10만호는 '20년 상반기 지구지정* 등 추진

* (신도시) 고양창릉·부천대장, (중규모) 수원당수2·안산장상·안산신길2 등

** 용인구성역 등 도시개발사업은 '20년 하반기 중 추진

- 로드맵 상 '20년 착공예정인 공공주택 8.2만호 중 1만호* 조기 착공 (2~6개월), 민간매입약정제 확대를 통해 매입임대 입주시기 조기화

* '20.上 1.6천호(남양뉴타운, 과천지식), '20.下 8,4천호(행복도시, 인천영종 등 9개소)

-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용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수도권에 행복주택 등 추가 건설('20.上 대상지 발굴, '20.下 사업승인)

* (2기 신도시)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GTX 역세권개발 방안 마련 등 자족기능 보완

2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

- 서울 도심부지(4만호)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'20년까지 1.6만호 사업승인 완료, 이 중 1천호는 연내 입주자 모집 진행

- 서울 내 주택공급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주도형 정비사업,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지원방안* 마련

* 서울에 필요한 소규모 정비사업, 1인 주거용 주택 등을 위한 지원방안

-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확대*(20.6), 공모 등을 통해 공공 시행 가로주택 사업지 발굴·정비 착수(시범사업, '20.10)

* 용자 금리 인하(1.5% → 1.2%),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 시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

3. 인구구조 변화 대응

1 1인가구 주거지원 강화

- 독신가구 증가 및 주거트렌드 변화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, 주거비 지원확대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방안* 마련('20.6)

* 노후고시원 리모델링, 기숙사형·창업지원형 등 공급방식 다양화, 빌트인 주택 확대 등

- 가구변화 추세를 감안,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('20.10)하고 1~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

- **공유주택** 가이드라인을 마련('20.6),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시범 도입하고,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 도입('20.11)

②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

- 국민임대·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(물량 50~80%를 신혼부부 우선 공급) 약 2천호 등 **공적임대 5.2만호**를 **신혼부부**에게 공급
- 입주자 모집(1만호), 신규 사업승인(3만호) 등 **신혼희망타운** 본격 공급 착수, 단지 내 돌봄센터 조성 등 육아환경 개선
- **다자녀가구** 지원을 위해 2자녀 가구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('20.6)하고, 다자녀 매입·전세임대를 도입·공급(2천호, '20.3)
 - 다자녀 공공리모델링 주택 첫 공급(협소 원룸을 합쳐 2룸으로 확장, '20.3), 금융지원 시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및 대출한도 등 확대('20.1~)

③ 고령자 친화적 거주여건 조성

- 공공리모델링 주택(1천호), 사회복지관·영구임대 결합형 **고령자 복지 주택**(1천호)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**맞춤형 임대주택** 공급(총 1만호)
- 스마트홈 헬스케어 실증단지 구축, **스마트홈 서비스** 확산을 위한 플랫폼 등 기술개발 착수('20.6)

④ 빈집·방치건축물 정비 본격 추진

- 시급한 사회문제(안전사고, 주거환경 저해 등)인 쇠퇴지역내 **빈집**의 정비·활용을 위해,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내 빈집 철거비용 지원*
 - * 소유자가 10% 부담하고, 철거 후 부지를 3년 이상 공공용(주차장 등)으로 활용시 최대 1천만원
- 빈집 밀집지역에 대한 **소규모주택정비**(가로·자율주택정비사업) 추진을 위해, 저리 기금 **융자***를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착수(4곳 이상, '20.10)
 - * (한도) 총 사업비의 50%(공공참여시 20%p, 공적임대 20% 공급 시 20%p 추가) / (금리) 1.2%
- 10년이상 **방치된 건축물** 정비 의무화(방안 마련, '20.11), 공공 주도 정비 사업·도시재생인정제도·공공주택 건설 등을 통해 정비(시범사업 5곳, '20.6)

4.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

① 부동산시장 관리체계 강화

- 권역별 주택시장 협의체 정례화 및 정기 모니터링 강화 등 **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**, 주택가격동향조사·소비심리지수 등 통계 개선
 -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관리 제도를 조사·분석하여, 부동산시장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검토('20.6)
-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, 전담 특사경 배치 등 **불법행위·실거래 상시 조사체계 구축**('20.2), 자금조달계획서 강화('20.3)를 통해 **거래질서 확립**
- **공시가격**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세 반영률 지속 제고, 산정방식 및 기초자료 공개 등 투명성 향상, **중장기 로드맵 수립**('20.10)
-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하여 무순위 물량을 최소화하고, 당첨 시 거주 의무기간을 확대하는 **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제도** 개선(법 개정, '20.6)
-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('20.6), **대토·채권 보상 활성화**를 위한 제도 개선('20.10) 등 **시장관리 기반 정비**
 -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되도록 **분양가 산정기준 개선***(방안 마련, '20.3)
 - * 기본형건축비 산정모델 개선, 41~49층 기본형건축비 고시, 발코니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등

②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조성

- **임차인 보호** 기반이 되는 임대차 신고제를 차질없이 도입(법 개정), 등록임대 사후관리 강화 및 임차인 정보접근성 제고('20.4)
- **단독·다가구 세입자**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확대방안 마련, 보증기간에 따른 보증료 역차별 개선 등 **보증료를 체계 개선**('20.6)

③ 정비사업, 주택조합 공공성 강화

- 의무임대는 장기임대로 활용('20.9)하여 정비사업의 **공공성** 제고, 입찰보증금 납부기준 제시('20.9) 등 **공정한 입찰환경 조성**
- 주택조합의 조합비 사전 총회승인 의무화, 조합 정보공개 확대, 주요정보 주기적 공시(지자체) 등을 통해 **선의의 조합원 피해 방지**('20.7)

4 교통 시스템을 혁신하여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들겠습니다.

< 대국민 약속 >

◆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개선하고, 플랫폼을 통해 **모빌리티를 혁신**하여 누구나 **즐거운 출퇴근길**을 만들겠습니다.

1.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

1 철도망 확충으로 이동속도의 획기적 제고

- GTX A노선 공사, B노선 기본계획 착수('20.1), C노선 민자 기본계획 고시('20.11), 신안산선 공사, 서부권 등 급행철도 검토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
- 중앙선(원주~제천)에 EMU-250(260km/h) 연내 투입, **400km/h 초고속 열차 도입** 착수(추진 중인 고속철도 2복선화 구간의 기본계획 반영, '20.10)
 - * (열차운행 세부전략 수립) 거리·속도·이용패턴 관점에서 간선열차 운행체계 개편 착수('20.4)

2 간선 도로망 기능 강화

- **대심도** 지하고속도로 설계 및 타당성평가 기준 마련, 지하 토지사용 보상근거(도로법)·보상액기준 등 마련 후 시범사업* 착수('20.11)
 - * 판교~퇴계원, 강일~일산 등 수도권 간선망 사업 대상 사전타당성조사 착수
 - 소음·진동·안전 걱정없는 **대심도 교통시설** 건설 **법적기반** 정비('20.6)
- 1·2순환망 연결 등 **방사형 도로망** 보완, 서해안·제2경인 등 수도권 고속도로 소통애로구간 개선대책 마련('20.11)으로 **수도권 교통혼잡 해소**
 - * (이용자 중심 기능형 도로네트워크) 국가고속망, 권역간선망, 생활도로망 체계 구축('20.11)

3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

- 서울역('20.2) 및 청량리역('20.3) **환승센터** 구상에 착수하여 **철도망 연계교통 이용편의** 제고 및 서울 강북지역 **활성화** 지원
 - 공공기관 참여 확대, 공공주택·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를 통해 **주요 환승센터 사업*** 신속 추진, 권역별 **환승센터 기본계획** 수립('20.11)
 - * 유성터미널·울산역·사상역·태화강역(착공), 킨텍스역(설계), 청계산입구역 등(사전타당성조사)
 - ** (수도권 고속도로 환승벨트 계획 수립, '20.11) 하남드림休 등에 철도·트램·버스 등 연계

- GTX 거점역(환승센터 등)을 중심으로 도시철도, 트램, BRT 등 **대중교통 연계체계**를 확립하여 **철도역 접근시간 단축**(방안 마련, '20.11)
 - **퍼스트·라스트 마일***을 위한 **공유모빌리티 환승시설 설치기준** 마련, 개인용 이동수단의 **안전 및 활성화**를 위해 **전용도로 도입, 법령 정비**('20.11)
- * (퍼스트 마일) 출발지점에서 대중교통까지 거리, (라스트마일) 대중교통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거리

2. 교통 편의 제고

① 대중교통 이용편의 개선

- M버스 노선 **확충**(35→44개) 및 **예약제 확대**(8→20개), **수요맞춤형 M버스 도입**('20.9), **고속버스 프리미엄노선 확대**(15%) 등 **대중교통 확충**
- **대중교통의 속도 제고**를 위해 **S-BRT 기본설계 착수**('20.9), **간선도로에 고속 전용차로**, **연계환승시설을 갖춘 BTX 도입**(추진방안 마련, '20.8)

② 편리한 서비스 확대

- (철도) 인터넷 포털을 통한 **승차권 예·발매 시행**, **승차권 무료 예약 변경 서비스 확대**(SRT, '20.11), **모든 열차에 Wi-Fi 중계기 100% 설치**
- (도로) **소형 회전교차로 시범적용**(4~5곳), **지능형 교통신호 확대**(439곳), **병목구간 개선**(178곳) 및 **다차로 하이패스**(13곳) 설치 등 **편의성 향상**
- **주차난 해소**를 위해 **공영주차장 집중 공급**(280곳) 및 **생활SOC 복합화 조성사업 지원**, **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강화**('20.6)
- (공항) **주차장 예약시스템 도입**(김포·인천 등) 및 **전국**(김포·김해 등)으로 **입국장 면세점 확대**('20.6), **이지드롭 확대**(서울 호텔, '20.9)

③ 신도시 교통불편 완화

- **기존 신도시** 광역교통시설 사업 지연지역을 **특별대책지구**로 지정하여 **보완대책 시행**('20.11), **신규 신도시*** 광역교통개선대책 **신속 수립**

* 2차 지구(남양주·하남·인천·과천): '20.上, 3차 지구(고양·부천): '20.下

3. 교통 공공성 강화

①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

-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('20.6) 광역버스 소외정도 등을 감안한 시범사업('20.7) 실시로 **광역버스 서비스 혁신기반** 마련
- 휠체어 탑승버스(4개 → 8개노선) 및 전용 콜택시(3,420대 → 3,680대) 확대, 철도플랫폼 고상화, 철도역 엘리베이터 확충 등 **교통약자 배려** 확대

② 교통비 절감 확산

- 광역알뜰교통카드를 13개 시·도에서 본격 추진하고('20.1, 7만명), 저소득층 청년 마일리지 혜택을 확대하여('20.3) **대중교통비 절감**
-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·할증제도 개선(방안 마련, '20.11), 대구부산·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('20.11)

4. 교통 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

① 도심 내 교통까지 항공운송 패러다임 확장

- 비가시권·다수비행 지원 K드론시스템 실증('20.5), 드론택시 시험비행 및 비행자유화구역 지정('20.11)을 통해 **도심형 항공모빌리티(UAM)** 선도

② 자율주행차 서비스 조기 확산

-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확대(45인승 버스, 세종 '20.10), **레벨3** 안전기준 시행('20.7), **레벨4**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('20.11) 등 **자율주행 가시화**

③ 플랫폼 택시 확산

-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차질없이 법제화하고,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 설립('20.6)을 통해 **혁신적 플랫폼 택시 모델**을 **대중적으로 확산**

④ 한국형 MaaS(Mobility as a Service) 활성화

- * MaaS: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교통수단을 한 번에 검색·예약·결제하는 서비스
- 주요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**관광형 MaaS** 확산('20.4), 버스·택시·렌터카·자전거 등 사업자와 협의하여 **도심형·거점형 등 MaaS 도입방안** 마련('20.7)

5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

< 대국민 약속 >

- ◆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하고,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일상의 토대를 조성하겠습니다.

1. OECD 수준에 걸맞은 교통안전 확보

1] 교통사고 사망자수 2천명대로 감축('19년 3,351명, 14%이상 감축)

- 안전속도 5030 정착(연내 전국 시행), 및 제한속도 15존 도입, 우회전 일시정지, STOP 사인 설치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확립
 - 고령자·어린이 맞춤형대책* 수립('20.3), 음주운전 사고 보험금 구상액 상향('20.6) 및 高價차사고 과실비율체계('20.11) 등 자동차 보험 개선
 - * 고령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도입(공공형택시 대상 확대), 횡단보도 고령자 쉼터 확충, 어린이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(DTG) 의무화, 아파트단지 내 맞춤형 교통안전기준 신설 등
- 화물차 사고예방을 위해 모바일 DTG 보급을 확산하고, 배달업체와 협의체를 구축하여 이륜차 안전교육 확대 등 사업자 책임 강화
 - * (화물) 고령자 자격유지 검사, (이륜차)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도입 및 공익신고 활성화
- 행안부·경찰·지자체 등과 교통안전 범부처 협업프로젝트*를 가동해 역량을 집중하고,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핀셋 관리 강화
 - * 지자체별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도 주기적 공표, 교육·홍보 강화

2]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

- 살얼음 사고 예방 등 겨울철 교통안전대책('20.1)을 추진하고, 위험도로 개선 및 보행자 사고예방사업 확대* 등 위협요소 사전제거·예방
 - * 도로 기하구조(180곳) 및 교통사고 잦은 곳(65곳) 개선,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(300곳) 등
- AI 스마트CCTV 확충(500곳), 포트홀 24시간 내 보수시스템 구축('20.11), 터널원격제어·산사태예측체계 시범구축(10곳) 등 안전시스템 고도화*
 - *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(K-Road) 설계('20.10), 졸음쉼터 확충(고속 15곳, 국도 10곳)

③ 7년(항공), 6년(철도) 연속 사고성 사망사고 ZERO 化

- (항공) 관리대상 안전지표 확대(3 → 20종, '20.4), 안전정보 수집·분석 시스템 개발('20.7) 등 **위해요인 사전 발굴 및 개선 체계** 구축
 - 외항사 조종사 등에 대한 음주단속 근거 마련('20.11),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투자 유도를 위해 **안전지출·투자내역 공시제도** 시범시행('20.5)
- (철도) 운행차종 변경 시 기관사 실무수습 실시 제도화('20.10), 차량 제작 시 **국제 안전기준 적용 대상 확대**(고속차량 → 전 차종, '20.11)
 - * (철도시설 관리 고도화) 원격감시·자동검측설비 설치 등

2. 건설안전 위협요인 근절

①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3백명대로 감축('19년 428명, 14%이상 감축)

- 중대사고 시 재발 방지대책 승인 전 공사 불허(추가비용 발주자 부담), 안전 부실업체 별점 강화 등 **주체별(발주자·시공사) 책임 확대**
- 민간건축공사 부실감리퇴출('20.6) 및 감리비지급 확인대상 확대('20.11), 고위험공사 전반으로 **작업허가제 확대**('20.3) 등 **취약분야 집중 관리**
- 추락·끼임 방지를 위해 **CCTV 설치 및 작업지킴이**(유도원·신호수) 배치 의무화, 안전시설 설치비의 공사비 계상 등 **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**

②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

- 장기 미수검·불합격장비 처벌 강화 및 건설현장 사용·도로운행 제한('20.10),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 **안전검사 강화**
- 국민 불안을 덜기위해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 강화, 안전장치 의무화(원격조종, '20.6), 검사기관 평가·관리 강화 등 **타워크레인 집중 관리**

③ 불량자재 퇴출

- **레미콘 품질관리**를 위해 불량레미콘 납품 거부(또는 취소)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**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강화**('20.6)
 - * (자재관리 확대) 생산·수입·판매자에 품질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건설자재·부재 범위 확대('20.6)

3. 생활환경 안전 확보

① 노후SOC 및 지하공간 체계적 관리

- 중요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, 최소유지관리·성능개선 공통기준을 마련하고('20.3), **유지관리 투자 확대**(15종 시설 약 5.5조원, 40% 증가)
 - 현장점검 확대(200곳→240곳) 및 부실 점검업체 적극 퇴출, 인프라 총조사 및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('20~'23)을 통해 체계적 관리 추진
- 기초조사 강화, 협의기간 단축 등 현장 중심으로 **지하안전 영향평가 제도** 개선('20.9), **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** 마련('20.6)
 - * (지하공간지도) 27개 市 구축('20.12), 재해재난 발생 시 공간정보 1일 이내 제공('20.9, 시범도입)

②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

- 건축물관리법 시행('20.5)에 따라 **화재** 취약 다중이용건축물의 성능 보강 의무화*, 정기점검 의무 부여 등 **노후건축물 안전관리체계** 구축
 - * 보강 의무화 건축물 비용보조 사업 확대(72→384동), 모든 주택 자발적 성능보강시 저리용자 지원
- **화재대응능력** 향상을 위한 성능기반설계 도입방안('20.10) 및 불법 건축자재 유통 근절을 위한 건축자제품질 혁신방안('20.9) 마련

③ 도시 안전망 구축

- 지자체·관계기관 CCTV를 상호 연계하여 도시 안전을 제고하는 **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** 보급('19. 27곳→'20. 30곳) 및 **연계서비스*** 확대
 - * 여성 안심귀가(여가부), 해양 사고(해경), 112 피해자 보호(법무부), 배출가스 위반(환경부) 등

④ 생활 위해요소 대응

- **미세먼지 저감**을 위해 한국형 2층 전기버스 공급(20대), M버스 대·폐차 및 신규노선 개설·증차 시 CNG·전기버스 전환 유도(인가 면허기준 강화 등)
 - 수소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부제 적용예외,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('20.7), **중온 아스팔트** 단계적 확대 적용
- 신종 바이러스 등 **감염병 확산 방지**를 위해 공항, 철도역사, 터미널,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방역 철저, 관련 종사자 위생관리 지원

IV. 2020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| | 주요과제 | 국민체감 성과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 | 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노후산단 재생) 상상허브 2곳 내외, 산단연계 재생 3곳 등 착수 ▶ (도시재생 뉴딜) 거점형 뉴딜사업 4곳 착공, 15곳이상 신규 선정, 기선정사업('17~'19년 284곳)에서 300개 내외 생활SOC 공급 ▶ (캠퍼스 혁신파크) 선도사업지 3곳 착공, 신규사업 공모 ▶ (공항 특화 주변개발) 시범사업 1~2곳 착수 ▶ (혁신도시) 기이전기관(21개)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▶ (새만금) 태양광 선도사업, 수변도시 조성사업 착공 ▶ (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인프라 사업) '20년 재정 1,883억원 투입 |
| 2 |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스마트시티) 세종 착공, 기존도시 스마트사업 확대(10 → 18곳, 통합플랫폼 30곳), 해외도시(5곳)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▶ (스마트건설) 스마트터키 사업 지속 확산(6건) ▶ (수소 경제) 수소시범도시(3곳) 종합계획 수립, 수소충전소 17기 추가설치(휴게소 15, 혁신도시 1, 행복도시 1) ▶ (공간 정보) 국토위성 발사, 디지털 트윈 서비스 시범운영(전주) ▶ (일자리) 창업공간 1,171개 조성, 일자리창출 21,528명 ▶ (건설) 임금직불제 민간공사 확산, 하도급 간접비 별도 지급 ▶ (택시) 전액관리제 정착, 개인택시 양수요건 완화 ▶ (물류)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, 택배 근로환경 개선 |
| 3 | 포용적 주거복지망 확충 및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년: 공적임대 4.3만호, 기숙사형 청년주택 1천호 신혼부부: 공적임대 5.2만호, 신혼희망타운 1만호 고령자·저소득층: 공적임대 8.6만호 등 ▶ (쪽방 정비사업) 서울 영등포 지구지정, 지방 1곳 선정 ▶ (노후아파트 정비) 서울 영등포 영진아파트 정비 착수 ▶ (청년 세어하우스) 노량진 노후 고시원 매입 후 리모델링 ▶ (층간 소음)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·확인제도 도입 ▶ (부동산 공시가격) 단독주택, 토지,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|
| 4 |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한 편리한 출퇴근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모빌리티 혁신) 드론택시 시험비행, 자율차 레벨3 기반 완비 ▶ (플랫폼 택시) 플랫폼 택시 대중적 확산 ▶ (교통인프라) 철도 노선 11개 개통, 간선 도로망 267km 개통 ▶ (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 개선) '19년 85km, '20년 76km ▶ (대중 교통) M버스 노선 확충(35 → 44개), 예약제 확대(8 → 20개), 인터넷 포털을 통한 열차승차권 예·발매 ▶ (교통 편의) 공영주차장 확충(280곳), 공항주차장 예약시스템 도입 ▶ (장애인용 대중교통) 버스(4 → 8개), 콜택시(3,420 → 3,680대) ▶ (광역알뜰교통카드) '19년 8개시·도 2만명, '20년 13개시·도 7만명 ▶ (민자도로 통행료 인하) 대구-부산(재정도로 대비 2.33배→1.1배), 서울-춘천(재정도로 대비 1.5배→1.1배) |
| 5 |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교통사고 사망자) '19년 3,351명, '20년 2,800명대 ▶ (항공 100만 비행횟수당 사고건수) '19년 3.8건, '20년 3.6건 ▶ (철도 운행거리 1억km당 사고건수) '19년 9.0건, '20년 8.5건 ▶ (건설현장 사고성 사망자) '19년 428명, '20년 360명대 ▶ (기반시설 유지관리 투자) '19년 3.9조원, '20년 5.5조원 ▶ (건축물 안전관리) 다중이용건축물의 화재 성능보강 의무화 |

| 국정과제 | 추진현황('17~'19) | 향후계획('20~'22) |
|--|---|--|
| <p>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생활비 경감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시행('17~'18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국 89개 시·군·구로 시범사업 확대 시행('19) ○ 대광역 설립('19.3), '광역교통 2030' 선포('19.10) ○ 광역급행버스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천·경기 14개 노선 신설('17~'19) - 운행가능거리(30km→50km)('18. 2), 운행가능지역(수도권→대도시권)확대('19. 12) ○ 광역급행전철망 건설 및 기존 전철망 급행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A노선) 실시협약체결·실시계획승인('18.12) - (B노선) 예비타당성조사 통과('19.8) - (C노선) 예타('18.12) 후 기본계획 수립착수('19.6) - (급행화) 경부선 전철 급행화사업 완료 (대피선 2개소 설치) 및 확대 운영('19.12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광역알뜰교통카드 본사업 시행('20~) * 전국 13개 시도, 101개 시·군·구로 확대 ○ 광역버스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노선 신설) 대도시권 지역에 매년 광역급행버스 5개 노선 신설(면허 기준) * 지자체 수요조사 후 노선 확정, 2020년 총 운행거리 8,000km 증가 목표 ○ 광역급행전철망 건설 및 기존 전철망 급행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GTX-A·B·C 차질 없는 계획 추진 * (A노선) 전 구간 '23말 개통 목표 공사중 * (B노선) 기본계획 수립 착수('20.상) * (C노선) 기본계획 수립 완료('20.하) |
| <p>32 국가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산업 관행 개선 및 육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설혁신방안 마련 및 업역폐지('18.11), - 임금직접지급제(공공) 의무화('19.6) -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마련('19.11) -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 수립('18.10) -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('18.12) - 해외투자개발사업 지원기구(KIND) 설립('18.6) - 글로벌·플랫폼·스마트시티 펀드 조성('19.6) ○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운임 심의의결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운영('19.7~) 및 안전운임 공표('19.12) ○ 물류 인프라 구축 및 R&D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물류 R&D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('17.8) - 물류센터내 자율운송로봇 기술개발('18.7) - R&D과제(스마트물류) 예타신청('19.11) - 화물차휴게시설 종합계획 수립('19.12) ○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외곽, 천안·논산 등 5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('19.12), 명절·동계올림픽 통행료 무료화 - 수소충전소(8)·졸음쉼터(51)·빌리지존(148개)설치 ○ 철도공공성 및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남부내륙, 평택-오송 기본계획 착수('19.12) - 강릉선('17.12), 동해선('18.1), 서해선('18.6), 호남고속철(광주송정~고막원) 개통('19.4) - OSJD 정회원 가입('18.6) 및 '23 장관회의 유치('19.6), 동철공 국제세미나 개최('19.9) ○ 노후 SOC 고도화 및 안전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관리수준 평가제와 안전투자 공사제 도입('18.6) - 성능기반 철도시설관리체계 확립('19.3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산업 관행 개선 및 육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설업종 및 등록기준 개편('20) - 공공발주 가이드라인 마련('20) - 임금체불 청산제도 모니터링 및 개선('20~) - 스마트건설기술 개발(R&D)사업추진('25) - 건설사업관리 실적관리체계 개편('20.6) - 스마트건설지원 2센터 건립('21) -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('22) ○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운임제 운영상황 모니터링('20.1~) - 안전운임제 운영상황 평가('22.12) ○ 물류 인프라 구축 및 R&D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및 접이식컨테이너 기술 실증 및 사업화기반 마련('20.12) - 교통연계평가 반영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('20) - 물류센터내 자동화셔틀·포장기술개발('20.12) ○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구부산, 서울춘천, 광주원주, 상주영천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, 명절통행료 무료화 - 수소충전소(52개소)·졸음쉼터(60개소)·빌리지존(60개소) 설치 ○ 철도공공성 및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추진('21.6) - 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국제포럼 설립('20.6), OSJD 정회원 활동 본격화 ○ 노후 SOC 고도화 및 안전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철도시설 개량사업 시행계획 수립('20.2) - 일반·도시철도 내진보강 추진('20.12) |

| 국정과제 | 추진현황('17~'19) | 향후계획('20~'22) |
|--|---|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4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고부가가치 창출 마다형 신산업 발굴 육성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 취약지역 이동권 및 택시 근로여건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형 택시 국고보조사업 개시('18.4) -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사업 확대('19.12) ○ 자율협력주행 스마트 하이웨이시스템 확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테스트베드 K-City 구축('18.12) - 자율주행자동차법 제정('19.4) - 자율주행 대중교통·군집주행 시범('19.10·11) -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 마련('19.12) - 전국고속도로 정밀도로지도 구축('19.12) ○ 드론산업 육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체계적 드론산업 지원을 위한 드론법 제정('19.4) - 야간·비가시권 비행허용 특별비행 승인제 도입('17.11), 시범구역 지정('18.6) -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 착수('18.3) - 화성·제주 드론 실증도시 운영('19.7) -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3개소 시범운영('19.9) - 실기 시험장·복합교육센터 신규 착공('19.12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 취약지역 이동권 및 택시 근로여건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중교통체계 개편 가이드라인 마련('20.12) - 공공형 택시 129개 시군으로 확대('20.12) ○ 자율협력주행 스마트 하이웨이시스템 확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율차 시범운영지구 지정('20.下) -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운영('20.10) - V2X 보안인증체계 실증('20) - 무가선 트램 시범노선 구축 착수('20.下) - 레벨4 안전기준 마련 연구 착수('21) - 자율주행 기업지원 센터구축 완료('22) ○ 드론산업 육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('22) - 공공분야 드론 4천대 달성('21) - 드론 특화도시 구축('21) - 개인형 유무인비행체 유인 비행시험 준비('22) -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5개소 구축('21) - 드론 인증센터 구축('22)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6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공공임대) '18년 14.8만호→'19년 13.9만호 - (공공지원) '18년 4.6만호→'19년 4.7만호 ○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년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 발표('18.12) - 신규 건설형 유형통합모델 마련('19.9) ○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'18) - '20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(중위소득 44→45%) 및 보장수준 의결('19.7) ○ 사회통합형 주택정책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발적 등록임대주택 확대로 안정적 민간 임대주택 공급('17년 98만호→'19년 150.8만호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와 공공지원 민간 임대 연 4만호 공급('22년까지 장기공적임대 주택재고비율 9% 달성) ○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근거 마련 및 입주자격·공급기준 제도화('20) ○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설치·운영 활성화 - 어르신지원 주택 지속공급 및 신규 건설형 어르신 지원주택 착공 ○ 사회통합형 주택정책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발적 임대등록 촉진 및 임대차 제도개선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7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('18) -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4.3만호 공급('19) ○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용 지원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입자금 21,501건/30,186억원 지원('19) - 전세자금 43,755건/41,631억원 지원('19) ○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년 공공임대주택 2.8만호 공급('19) - 청년 매입·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단순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혼부부 임대주택 4만호 공급('20) ('22년까지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호 공급) ○ 신혼부부 대상 대출 8만호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'22년까지 신혼부부 대상 총 40만호 지원) ○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임대 2.5만호 공급 및 공공지원 2.4만실 공급 ('22년까지 셰어하우스 5만실,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 공급 등)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8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 발전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개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 ('19.6) ○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안부('19.2), 과기부('19.8) 이전 - 수도권 소재 4개 NGO 유치('19.10) - 서울-세종(세종-안성)고속도로 착공('19.12) ○ 혁신도시·새만금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육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개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타사업 확대('20~) ○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세종 신청사 착공('20.6) 및 준공('22) - 국제기구 유치 인센티브 제공안 마련('20.12) -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입주('21) - 수도권 소재 NGO 행복도시 입주('23) |

| 국정과제 | 추진현황('17~'19) | 향후계획('20~'22) |
|---|--|---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·발표('18.10) -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기관 확대('19.11) - 새만금개발공사 설립('18.9) -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예타 통과('19.5) ○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단지 혁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 국가산단후보지 선정·발표('18.8) - 전주탄소 국가산단 산단계획 승인('19.9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-세종(안성구리'22), 안성-세종('24) 구간 개통 ○ 혁신도시-새만금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육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혁신도시별 복합혁신센터 착공('20.12) - 새만금 태양광 및 스마트수변도시 착공('20.12) ○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단지 혁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산단 예타신청('20.9), 산단계획 승인('21~)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9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9년 116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등 284개 사업 추진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도시재생법」 개정('19.8)을 통해 도시재생 혁신지구, 총괄사업관리자 사업, 인정 제도 시범사업 (18곳) 선정('19.12) ○ 지역역량 강화로 도시재생 추진 기반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재생지원센터(322개)와 도시재생대학 (183곳) 운영 등 전문가 양성 및 가버너스 구축 ○ '19년 공공리모델링 2,6천호 승인 ○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형주택 패시브 수준의 기술이 적용 되도록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('18.12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거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투자를 확대하여 거점 조성(혁신 지구, 총괄사업관리자 사업) - 기존 사업지 철거 관리 및 점단위 도시 재생 인정사업 추진 ○ 도시재생 지역 전문가 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재생 뉴딜 청년인턴십 제도 확대 시행('20년 500명) 등 ○ 액티브 설비를 확대하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마련('20~) ○ '20년 공공리모델링 2,500호 승인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3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ICT 르네상스로 4차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(협조과제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스마트시티 조성·확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시범도시(부산 착공, 세종 실시계획 수립) - 통합플랫폼 보급(49곳), AI·데이터 기반 R&D·실증('18~'22), 챌린지(6곳) 등 - 인력양성('17~, 840명), 창업지원('18~, 1457개), 기업 얼라이언스 발족('19.2, 470개社) - 10여국과 협력 MOU 체결('18~), 한-아 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 개최('19.11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스마트시티 조성 본격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간기업 사업공고('20.上), 시범도시 SPC 설립('20.12) 추진으로 국가 시범도시 본격 조성 - 기존도시 대상 스마트화 추진 * 챌린지 사업 공고('20.1), 선정('20.5), 통합플랫폼 대상 지자체 선정('20.2), 혁신성장R&D 실증 착수(대구·시흥, '20.6) - P4G 정상회의('20.6), 엑스포('20.9)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7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·육성 (협조과제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준공(노원 '17.12) - 공공건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('19.4) -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준공(세종, 218) ○ 수소 시범도시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산, 울산, 완주·전주 선정('19.12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('20.1) - 제로에너지건축 지구단위 확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('20.6) ○ 수소 시범도시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마스터플랜 수립('20.하), 구축완료('22)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5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 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강화 (협조과제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범부처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('18.1) -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 장치(차로이탈경고장치 등) 보급 지원('18~'19) - 사고 잦은 곳, 위험도로 개선, 횡단보도 조명 시설·보도 설치, 터널 조명 등 개선 ('19.12) - 봄기울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마련('19~'20) - '안전속도5030' 시범사업 확대(서울부산 '19.11) -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의무화('19.4) ○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제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 및 권한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('18.12) - 지하안전특별법 시행령·규칙·지침 제정('17.12) -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수립('19.4) - '18~19년 지반탐사 운영(383개소, 1,453km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고 잦은 곳, 위험도로 개선, 횡단보도 조명 시설·보도 설치, 터널 조명 등 개선(계속) - 불법 차량 일제 단속 실시(계속) - 철도차량 이력관리시스템 구축('20.12) - '안전속도5030' 전국 확대('21.4) ○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제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건설안전)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 구축('20.12) - (지하안전) '20년 지반탐사 운영 * 170개소, 900km 실시 |